주간 통일정세

2016-0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Ⅰ.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 정치
4. 경제
5. 사회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Ⅲ.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군군포로
4.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KINU 통일연구원

주간통일정세 2016-03(2016.01.11~2016.01.17)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우) 137-756
전화 (02) 2023-8000 전송 (02) 2023-8209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Ⅰ.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외무성 "남조선 심리전 방송은 생뚱맞은 도발"(1/1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15일 담화를 통해 "우리의 수소탄 시험은 병진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정상적인 공정을 거친 것일 뿐"이라며 "남조선 괴뢰들의 심리전 방송 재개는 정상적인 공정과는 하등의 연관도 없는 생뚱맞은 도발" 이라고 주장했음을 보도함.
- 대변인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도발은 오히려 미국과 남조 선 괴뢰들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며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우리는 정세 격화에 관심이 없으며 그 누구에게 도발할 필요도 없다"고 역설함.
-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위협적인 도발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는데 대처하여 핵 공격 능력과 핵 보복 능력을 백방으로 갖출 것이지만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핵무기를 그 어디에도 전파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수단과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힘.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우리軍 대비태세 점검에 "제2의 전쟁참화 움직임" 위협(1/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남조선의 군부 호전광들 반공화국 대결 고취' 기사에서 "조선 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겨레의 지향에 역행해 남조선의 군부 호전광들이 반공화국 대결을 악랄하게 고취하고 있다"고 비난함.
-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 다음 날인 지난 7일 이순진 합참의장 주관 아래 진행된 긴급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 9일 한민구 국방장관의 육군 미사일사령부 방문과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는 부대 방문 등을 언급함.

- 통신은 "(이와) 때를 같이해 남조선군의 육·해·공군 부대들이 전선 중동부, 조선 서해 최대 열점수역을 비롯해 우리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최전연 일대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총포탄을 마구 쏘아대며 우리의 지역들을 타고 앉기 위한 실전 연습에 열을 올렸다"고 주장하였고, "새해 벽두부터 계속되는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 소동은 지난해의 8월 사태를 재현해 제2의 6·25 전쟁 참화를 몰아오기 위한 위험한 움직임으로밖에 달리는 볼 수 없다"며 위협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국방부 "北, 자체 확성기 방송으로 朴대통령 실명 비난"(1/1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2일 국방부가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10여 곳에서 자체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발표했음을 보도함.
-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의 확성기 방송에는 김정은의 우상화와 그에 대한 충성을 결의하는 내용이 많고 4차 핵실험을 정당화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개했으며, 우리 군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난 8일 최전방 10여 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군도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고 설명함.

■ 전단살포에 무인기까지…北,추가도발 탐색전인가(1/1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3일 보도를 통해 북한군이 지난 12일 오후와 13일 새벽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비난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대남 전단을 살포했으며, 이 전단은 13일 오전 서울과 의정부, 동두천, 파주, 양평 등지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함.
- 뉴스는 가로 12㎝, 세로 4.5㎝ 크기의 컬러 용지에 인쇄된 전단에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하여 북남관계 악화시킨 박근혜 패당 미친개 잡듯 때려잡자!",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당장 포기하라!" 등의 구호가 적혀 있었으 며, "전쟁 도화선에 불 다는 대북심리전 방송 당장 그만두라", "백두산 총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릴 것이다" 등 남측을 위협하는 글이 적힌 전단도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힘.

- 또한 뉴스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 북한이 서부전선 최전방 1사단 도라산 관측소 전방에 무인기를 띄워 이에 우리 군이 경고방송 및 기관총 20여 발의 경고사격을 했다고 전함.

■ 북한, 이틀째 전단 살포…파주·고양서 대량 발견(1/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군이 살포한 것으로 보이는 대남 선전용 전단이 13일에 이어 14일 경기도 파주와 고양지역에서 또 대량으로 발견됐다고 14일 보도하면서, 경찰과 시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 20분께 파주시 탄현면 일대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용 전단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함.
- 뉴스는 또한 같은 시각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도 차량 위로 대남전단 묶음이 떨어져 지붕이 일부 파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며, 풍선에 실려 날아온 이 선전물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요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정부 "개성공단 철수·폐쇄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1/1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통일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개성공단 철수 혹은 폐쇄론에 대해 "(개성공단 폐쇄 등은) 정책적인 마지막 수단을 쓰는 것"이라면서 "지금으로선 폐쇄 등을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발표했음을 12일 보도함.
-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두 차례 신변안전 조치 차원에서 (개성공단으로) 인원이 들어가는 것을 제한했고, 지금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가장 중시해야 할 단계"라며 "국제공조 체제 구축이 종료되면 그때까지의 정책적 검토를 리뷰해 볼 것이고, 그때 약간씩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고 덧붙임.
- 그러면서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북측이 초래한 도발 상황이기에 스스로 자신들이 (합의를) 뒤엎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아울러 기업과의 협의에 따라 진짜 필요한 인원으로 (출입경 인원을) 맞춘 것이지 기업활동을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닌 만큼 위반이라고 말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뉴스는 전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우리 軍이 1월 1일 새해 첫날 실시한 군사훈련들을 거론하며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남조선 호전광들은 우리(北)의 정당한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 조치에 대해 그 어떤 시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1.11, 중앙방송)
- '北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국방부 장관(1.9, 신속 정확한 응징)·합참의장(1.7, 실질적인 태세 유지, 강력한 응징)의 발언과 우리 軍의 대비태세 점검 활동 관련 '지난해의 8월 사태를 재현하여 제2의 6·25전쟁 참화를 몰아오기 위한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비난(1.13, 중앙통신)
- 우리 정부의 '통일외교'를 거론하며 '외세와의 공조책동은 북남대결을 격화시키는 매국배족 행위'라며 '남조선 당국은 반민족적인 외세와의 공조책동에 수치를 느끼고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1.13, 중앙통신·중앙방송)
- 우리 정부와 여당의 北 4차 핵실험 대응(안전보장회의 개최·핵무장 언급 등)에 대해 "동족증오 의식과 적대감"이라며 "우리(北)가 수소탄까지 보유한 것은 동족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침략자, 도발자들과 총결산하기 위해서"라고 강변(1.14,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우리 해군의 해상 실사격훈련(충남 태안 앞바다, 1.15) 진행 관련 CBS방송을 인용하여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반통일대결집단의 정체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비난(1.15, 중앙통신·중앙방송)
- 韓美 합동군사연습은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켜온 근본요인'이라며 '불안정한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시키고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자면 무엇보다도 남조선 당국이 군사적 도발 행위들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1.16, 중앙통신·노동신문)
- 국군 35사단의 '혹한기훈련' 예정(1.18~29) 뉴시스 보도 인용, "호전광들의 전쟁연습 소동은 조선반도 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는 장본인"이라고 비난(1.17, 중앙통신·중앙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 B-52 한반도 출동에 첫 반응…"전쟁 접경에로 몰아가"(1/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정세론 해설 '핵에는 핵으로, 이것이 우리의 대응 방식이다'에

서 “지금 미국은 남조선에 핵전략 폭격기 편대를 들이민다 어쩐다 하며 정세를 전쟁 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함.

- 그러면서 신문은 “미국이 군사적 힘으로 우리를 어째 보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고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는 개꿈”이라며 “미국은 언제나 패하고 수치만을 당했다. 이 전통은 영원히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또 지난 6일 단행한 ‘수소탄 실험’은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며 핵실험에 대한 ‘당위성’을 거듭 강조함.
- 또한 “(미국은) 쩍하면 핵 항공모함과 핵전략 폭격기를 남조선과 그 주변에 들이밀고 우리의 종심에 대한 핵 타격 연습을 뻔질나게 벌리였다”며 “(목적은) 벼르고 별러온 우리에 대한 핵 공격 계획을 기어이 실천에 옮기자는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난해에는 미국이 북침을 노린 핵전쟁 연습을 임시 중지하는 경우 핵시험을 임시 중지할 용의가 있으며 미국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는 아량도 보여줬다”고 지적함.

■ 北 “미국 영토 일시에 없앨 수소탄 터뜨릴 기세 충만”(1/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논평에서 “우리는 소형화, 표준화, 규격화된 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까지 완전무결하게 장비하게 되었으며 다종의 핵탄들을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제한없이 운반할 수 있는 최첨단 타격수단들을 갖추게 되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삶의 요람이고 행복의 보금자리인 공화국을 한사코 압살해보려고 덤벼드는 미국의 땅덩어리 전체를 일시에 없애버릴 수 있는 몇백 kt, Mt급 수소탄도 연거푸 터뜨릴 기세에 충만되어 있다”고 덧붙임.

■ 북한 “미국 ‘평화협정’ 외면은 국제 범죄행위” 주장(1/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 조선법률가위원회가 14일 발표한 백서에서 “조미(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한사코 반대하고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고 발광하는 미국의 책동은 위험천만한 국제범죄이며 평화관계 수립의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국제불법행위”라고 주장했음을 보도함.
- 뉴스에 따르면 백서는 “오늘의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정전협정을 환원복구할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으로 교체할 것을 절실히 요구한다”며 “평화협정 체결은 조선반도만이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규정했으며, 이어 “선 핵포기를 평화협정체결의 전제로 내세우는 미국의

주장은 평화관계 수립의 일반적 전제로 보나 조미 평화협정 체결 문제의 발생 근원으로 보나 천만부당한 궤변"이라고 주장함.

- 또한 백서는 "우리와 미국 사이 관계는 단순한 기술적 전쟁 상태로부터 사실상의 교전 관계로 전환됐다"며 "미국에 있어서 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항시적인 대결과 전쟁 상태를 유지하며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기 위한 반공화국전략 실현에 이용되는 조건에서만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임.

■ 조선신보 "북핵 '中 책임론'은 무지·편견의 산물"(1/1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5일 '허황한 중국책임론'이라는 제목의 '메아리' 논평을 통해 "(중국 책임론은) 조선(북한)이 4번째, 그것도 수소탄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치르 게 만든 것은 조선에 대해 '가장 영향력을 가진 책임 있는 대국' 중국이 유엔리 제재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효과 있는 압력을 가하는 것을 태공(태만을 누림) 해왔기 때문이라는 론거(논거)"라면서 "이 자체가 조선에 대한 무지와 편견, 대국의 론리(논리)의 산물"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서방 나라들이 중국을 문책하듯 압박을 가하다 나니 중국 측도 반발하고 있다"면서 "조선이란 나라는 결코 중국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대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론평(논평)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박근혜(대통령)가 주제넘게 나서서 중국을 압박하려다 망신한 사실은 그의 무지와 무능, 파렴치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 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신문은 "중국이 오늘과 같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은 것은 '양탄일성'(兩彈一星), 다시 말하여 원자탄과 수소탄 그리고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개발·소유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며 "그러고 보면 조선도 명실공히 강성국가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한 셈"이라고 덧붙임.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북한, 핵실험 때문에 다보스포럼서 퇴짜(1/1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세계경제포럼(WEF) 조직위원회가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의 북한 대표단 참석을 거부했다고 13일 보도함.
- 뉴스에 따르면 WEF 조직위원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WEF 본부에서 다보스포럼 관련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 북한 대표단의 참석 여부를 묻는 말에 북한이 지난주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초청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이에 WEF 조직위원회의 국가별 대표단을 관리하는 필립 로슬러 박사는 "지난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화에 참여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여러 징후가 있어 북한에 초청장을 보냈고, 북한의 외무상이 참석하기로 했었으나 북한이 지난주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초청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발언함.

■ 北, 다보스포럼 참가 퇴짜에 "온당치 못한 행위" 비난(1/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제네바 유엔사무국 및 국제기구 주재 조선 상임대표가 세계 경제연단경영국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편지는 이미 계획됐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의 다보스 세계경제연단 참가가 연단 측의 불의적이며 무책임한 처사로 취소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고 14일 보도함.

- 통신은 "조선 대표단이 기구 측의 거듭되는 요청을 고려해 세계경제연단에 참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친선적이며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추동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연단 측은 경제문제를 논의하는 국제기구로서 성격과 체모에 어긋나게 부당한 정치적 이유로 대표단의 참가를 일방적으로 취소시키는 행위를 했다" 고 주장함.
- 이어 "연단 측의 처사는 공화국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시 정책에 매여달리고 있는 일부 세력들의 책동에 편승하는 것"이라며 "국제기구로서의 초보적인 공정성과 원칙마저 상실한 매우 온당치 못한 행위"라고 비난함.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김정은의 신년사와 새해축전 과업 관철'「총련」일꾼들의 모임, 1월 9일 일본 도쿄 조선회관에서 진행(1.11, 중앙통신)
- '北 첫 수소탄 시험 성공을 지지'하는 외국선박 선원들의 연대성 집회, 1월 11일 남포항과 원산항에서 각각 진행하고 김정은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1.11, 중앙통신)
- '미국은 '북핵 및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내들고 남조선을 해외군사력 전개의 주요거점으로 전환시켜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하고 동북아 지역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1.12,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미국의 지난해 대북제재(금융제재,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를 거론하며 '미제의 제재 압박책동은 우리(北)의 자강력에 의해 아무런 맥도 추지 못하고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며 '미국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발악해도 우리의 의지와 기개를 절대로 꺾지 못한다'고 주장(1.16, 중앙통신·노동신문)
- 사회과학원 사회정치학연구소 소장(서성일), '미국이 세계 제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수소탄을 만들어 냈다면 조선은 철저히 자위적 목적,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원자탄과 수소탄을 개발했다'고 주장(1.16, 중앙통신)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수소폭탄 실험' 관계자들과 기념사진(1/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성공에 기여한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노동자, 일꾼들을 조선

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청사로 부르시여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참가자들이 자강력 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수소탄 시험을 성공시킨 그 기세, 그 기백으로 계속 전진, 계속 혁신해나감으로써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고 덧붙임.
- 통신은 이날 행사에는 리만건, 리병철, 박도춘 등이 김 제1위원장을 수행했다고 전하며, 사진 촬영이 언제 이뤄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음.

■ 김정은 "美핵공격 가능하게 핵무장력 강화"…국제제재에 첫 언급(1/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수소탄 시험 성공' 핵과학자 등에 대한 '당 및 국가 표창' 수여식에서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를 제재한다, 전략 무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인다하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면서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다"고 강조하였음을 보도함.
- 통신은 특히 김 제1위원장이 "적들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위협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세력에게 핵공격을 가할수 있게 핵무장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함.
- 이어 김 제1위원장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악착한 경제봉쇄와 군사적압박으로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려고 피눈이 되여 사면팔방으로 달려들고 있다"면서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는 강인담대한 정면돌격전을 벌려 적들이 최강의 핵보유국인 우리를 똑똑히 알게 하여야 한다"고 덧붙임.
- 또한 이날 '수소탄 시험 성공'에 기여한 핵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애국의 초침을 당의 숨결에 맞추어 투쟁한 동지들 모두는 역사에 길이 남을 영웅 중의 영웅이며 애국자 중의 애국자들"이라고 치켜세우며 "동지들이 바친 고심어린 탐구와 애국충정의 땀방울에 의해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우리 나라(북한)는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주장함.

■ 北 김정은, 기타 치며 노래…친근한 이미지 부각(1/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동지애의 깊은 뜻을 새겨주시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느

해 무더운 여름철에도 애국헌신의 세계를 펼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께서는 잠시 휴식하시게 된 기회에 일꾼들에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자고 말씀하시었다"며 "원수님께서는 친히 기타를 드시고 자신께서는 '동지애의 노래'를 제일 사랑한다고 하시며 기타 선율에 맞춰 노래를 부르시었다. 일꾼들도 따라 불렀다"고 보도함.

-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이런 모습을 보인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음.

■ 北TV, 김정은이 받은 '장검' 등 선물 소개(1/16,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6일 오후 방송한 연속참관기-위인칭송의 고귀한 재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친선전람관에는 김정은 동지를 열렬히 흠모하며 외국 정계, 사회계, 각계층 인사들이 올린 지성어린 선물들이 전시됐다"고 밝힘.
- 중앙TV는 2012년 11월2일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선물했다는 '디마스크(다마스쿠스)' 장검을 소개하며 "선물에는 김정은 동지께서 장검을 드시고 앞으로도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제국주의자들과 강경하게 맞서 승리만을 이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고 주장함.
- 또 2014년 4월14일 몽골의 여러 단체가 공동 명의로 선물했다는 그림 '선군조선의 태양 김정은 동지'도 소개했으며 작품에는 북한 국기를 배경으로 군중에 손을 들어 인사하는 김 제1위원장의 모습이 담김.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다. 공식 행사

■ 北, 핵개발 관여자들 극진 대접…10만명 동원해 환송(1/13,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수소폭탄 실험' 관여자들이 5박6일간의 평양 체류를 마치고 지난 13일 평양을 떠난 사실을 전하면서 "수십리 연도에서 10여만의 수도 시민들이 자랑스러운 영웅들을 향해 꽃다발을 흔들며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고 보도함.

- 방송은 평양시민 10만여 명이 대학거리에서부터 연못동에 이르는 대로변에서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 건설자, 노동자, 일꾼들을 환송했다고 전했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 개발자들이 수도 평양에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축복 속에 최상최대의 영광을 누리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고 덧붙임.

■ 北, 청년동맹 70돌 행사 연일보도…"대북제재 겨냥 체제결속"(1/13, 조선중앙TV; 1/14, 노동신문)

- 조선중앙TV는 13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평양 도착 소식을 전하며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가는 총진군 대오의 척후대 익측 부대로서의 영예를 떨쳐온 이들은 관계 부문 일꾼들과 청년 학생들이 뜨겁게 맞이했다"고 보도하며 이들이 만수대 언덕에 세워진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참배했다고 밝힘.
- 노동신문은 14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창립 70돌 경축 행사에 참가할 대표들이 13일 평양에 도착했다"며 "2016년의 서막을 장쾌한 수소탄의 폭음으로 열어젖힌 그 기세, 그 기백으로 강성국가 건설의 전투장마다 영웅적 위훈을 떨쳐갈 혁명적 열의에 넘쳐 있었다"고 전함.

■ '돌아온' 최룡해 연일 공식활동…기념공연 관람(1/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창립 70돌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가 진행됐다"며 "최룡해 동지, 양형섭 동지와 청년동맹 일꾼들, 경축행사 대표들이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출연자들은 이 땅 위에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대강국을 일떠세우신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업적을 격조 높이 칭송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이날 홈페이지에 최 당비서의 공연 관람 영상을 공개했는데, 지난 11월 신변 이상설 이후 그의 활동 모습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의자에 앉아 차분한 표정으로 공연을 지켜보는 모습으로 1분 40초 분량의 영상 초반에 잠시 등장함.

■ 北, 청년동맹 70주년 보고대회…최룡해 참석(1/16, 조선중앙TV)

- 북한이 16일 평양체육관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창립 7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 등이 보도함.
-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최룡해 당비서가 대독한 축하문에서 "우리 청년과학자들과 청년들은 우주기술, 핵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요새를 점령하며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다그치는데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푸는데 핵심적, 선봉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함.

- 이날 행사에는 최 당비서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용진 내각 부총리, 리일환 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주석단에 자리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김정은, 또 김일성 흉내내기…자력갱생 구호도 재활용(1/11, 통일신보; 1/12, 우리민족끼리)

- 통일신보는 11일자 기사에서 "자강력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든든하게 하는 힘을 말한다"라고 설명한 뒤 곧바로 "우리 공화국을 자력갱생의 모범의 나라, 주체의 강국으로 명성 떨치게 해주신 분은 위대한 김일성 주석이시였다"고 밝혀 자력갱생과 자강력 제일주의가 관련이 깊다는 점을 강조함.
- 우리민족끼리는 12일 '자강력 제일주의가 안아온 거대한 승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혁명의 전력사적 과정에 관통되여온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오늘 자강력 제일주의로 승화되여 이 땅 위에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눈부신 현실을 연이어 펼쳐놓고 있다"고 주장함.

■ 北, 핵과학자 양성 독려…"인재의 바다 이루도록 하자"(1/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제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핵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학 부문 인재 양성을 독려하고자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 높이 핵과학자들과 같은 미더운 인재들을 키워내자"고 보도함.
- 신문은 '교육혁명의 조타수'라는 글에서 "조국의 푸른 하늘을 영원히 지켜갈 수 있는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추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다름 아닌 이 땅에서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며 자라난 우리의 과학기술 인재들"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수소탄 제작에 참가한 과학기술 인재들과 같은 훌륭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 것, 이것이 오늘 교육자들 앞에 나서는 첫째가는 과업"이라고 역설함.

- 또한 신문은 “모든 교육자들은 수소탄 제작자들과 같은 과학기술인재들이 나라에 바다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직업적 혁명가로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주요 과학교육 기관인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교육과학원의 핵실험 반향을 다룬 글에서도 지난해 여러 교육과학연구기관을 통합정리하고 교육과학원에 중앙교육과학연구기관의 역할을 부여했다면서 “첫 수소탄 시험의 완전 성공에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끼며 교육과학원의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들이 더욱 용기백배하여 떨쳐일어났다”고 선전함.

■ 北, 핵실험 후 연일 당대회 총력전…“김정은 시대 서막”(1/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승리의 5월까지는 이제 백수십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 백수십일을 십년, 백년 맞잡이로 주름잡아 내달려 우리 당역사에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전례없는 혁명의 최전성기를 마련하자”고 촉구함.
- 신문은 이 글에서 “제7차 당대회는 경애하는 원수님 모시여 인민의 모든 꿈 이루어질 만복의 내일을 가설이나 예측이 아니라 자기의 휘황한 설계도에 담아 펼쳐보일 민족의 대경사”라고 규정했으며, 이어 “당대회가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서막으로 될 것이라고 평하는 (각국) 언론들도 많다"면서 “인류가 크나큰 흥분 속에 맞이하고 앞을 다투어 전하는 새시대의 이름은 위대한 김정은 시대”라고 강조함.

■ 北, 대북제재 앞두고 ‘사상무장’ 독려…“가장 위력한 무기”(1/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자 1면 사설 ‘강력한 사상 공세로 올해의 총진군에서 새로운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자’에서 “백두산 대국의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시작된 2016년의 진군길에서 가장 위력한 무기는 사상”이라고 밝히면서, 대북제재를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 공세”라고 규정함.
- 신문은 이어 “사상 진지가 굳건하면 반제군사 전선도 경제문화 전선도 금성철벽”이라며 “올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비상히 놀라운 속도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나가는 데서 대중의 정신력 발동 외에 다른 묘술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함.
- 이를 위해 신문은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학습강사와 5호 담당 선전원 등 당 초급 선전일꾼들, 출판보

도 및 문학예술 부문, 각급 근로단체 조직 등의 '선전선동 활동'을 독려하였으며, 특히 "청년들의 교양문제가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선군시대 청년 돌격정신과 청년문화, 청년미풍 선구자들의 모범을 귀감으로 해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꾸준히 심도있게 벌려나가야 한다"며 청년동맹 조직들의 강도 높은 사상교양 사업을 주문함.

■ 北 '핵실험 자축' 지방으로 확산…내부결속 강화 목적(1/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의 완전 성공을 경축하는 군민연환대회가 시, 군들에서 진행됐다"고 전하면서 문천시와 단천시, 경원군, 배천군 등 대회가 개최된 20여개 시·군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핵실험 자축 분위기를 지방으로까지 확산시킴.
- 또한 신문은 대회의 연설자들이 "미제가 핵을 쥐고 우리를 위협 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종식됐다"며 "당의 영도 따라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는 데 적극 이바지할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임.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창립(1.17) 70주년 사진전람회 개막식, 1월 1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11, 중앙통신)
- '일심단결은 사회주의 조선의 불패의 상징이고 모든 승리와 기적의 원천'이라며 '당의 영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는 혁명대오의 공고성과 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하며 김정은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번영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1.12, 중앙통신·노동신문)
- 평안북도·황해북도·자강도·라선시 군민연환대회, 1월 12일 各各 진행(1.12, 중앙통신)
- 김형권(항일혁명투사) 사망(1.12) 80주년 관련 그의 혁명업적 칭송(1.12,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총리),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현지요해(1.13,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첫 수소탄 시험 성공에 기여한' 핵 과학자들과 기술자·군인건설자 등, 1월 8일부터 13일까지 평양 참관(1.14, 중앙통신)
- 김일성 황해북도 사리원시 현지지도 70주년 기념보고회, 1월 12일 김일권(사리원시당 책임비서, 기념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1.13, 중앙방송)
- '김정은 신년사 관철'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2·8직동청년탄광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현지에서 각각 진행(1.13, 중앙방송)
- 北, '김일성 일화집' 제8권(1946년 10월부터 1947년 6월까지 김일성의 일화들을 4개장으로 편집) 출판(1.13, 중앙통신)
- 인민군 내무군 지휘성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출발모임, 1월 14일 양강도 혜산시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앞에서 진행 및 보천보 향해 행군 시작(1.14, 중앙통신)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창립 70주년 경축 '취주악대행진', 1월 15일 진행(1.15,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20차 김정일화축전, 2월 중순부터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평양)에서 진행 예정 보도(1.15,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미래과학자거리 건설을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혁명사 적보존기술사 연구사 김옥금 등 17명)에게 '감사' 전달(1.16, 중앙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2·8직동 청년탄광 현지 요해(1.17,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897호(1.12字), 모범적인 단위들에 '3중3대혁명붉은 기(덕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탄광부재공장·강계 포도술공장) ·2중3대혁명붉은기(평 양 밀가루 가공공장 등) ·3대혁명붉은기(평천구역 종합식당 등)' 수여(1.17, 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北 '핵강국 자부심' 강조하며 생산현장서 증산 독려(1/12,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 조선중앙방송은 12일 "핵 강국의 자주적 인민으로서의 배짱과 자존심을 지니고 강성국가 건설의 격전장마다 혁명적 양양을 일으켜 나가고 있는 노동계급과 농업 근로자들의 헌신성에 의해서 10일까지의 공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장성했다"고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산업별로 전력 생산은 지난해보다 117.5% 늘었고, 운송 계획은 철도의 경우 100.9%, 육로 및 해로 운송은 120.0% 증가했으며 공업 생산은 4배, 물고기잡이는 수산 관리국별로 1.3~5배, 방적 실과 일반 천 생산은 2배, 신발류는 1.4배 증가함.
- 그러면서 방송은 또다른 보도에서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한 소식에 격동된 탄부들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석탄 생산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며 "함남지구 탄광 연합기업소의 생산 실적은 10일 동안에 계획보다 수천 톤이나 늘어났다"고 선전함.
- 노동신문도 "2016년의 장엄한 서막을 열어젖힌 수소탄 시험의 대성공은 남흥 노동계급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신심을 더해주고 있다"는 남흥 청년화학 연합기업소 일꾼의 인터뷰를 실으며 이곳의 비료 생산이 지난해보다 1.4배 늘었다고 소개하였고, 농업 등 각 생산 분야의 생산 증대를 독려하는 '올해 강성국가 건설에서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방도'라는 제목의 보도도 게재함.

나. 주요 조치

■ 중국산 금지령에 北 주민들 불만…"아이들 발 얼어야 하나"(1/11,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중앙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산 제품을 일절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며 "이후 규찰대가 나서 주민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중국산 제품 사용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보도함.
- 방송은 이에 따라 중앙의 지시를 받은 평양시내 학교들이 중국산 옷이나 신발을 착용한 학생들에게 집에 가서 바꿔 입거나 신고 오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학교들은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등교한 어린 학생들을 수업에 참가시키지 않은 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설명함.
- 소식통은 "중앙에서 조국산은 물량이 터무니없이 모자라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형편없는 경공업수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내리먹이는 중앙의 지시를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북한에서 간부들과 잘사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외국산 의류를 선호했다면서 일제나 한국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지만 중국산은 수입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국제'라고 할 정도로 대중화되었다고 현지 실정을 설명함.

■ 북, 개인 제조 당과류 판매 금지(1/13,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당국이 최근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개별적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당과류 식품에 대해 제조 및 유통을 금지시켰다고 13일 보도함.
- 북한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해 소식통은 "국가가 운영하는 식품공장에서 나온 당과류 판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속내가 엿보인다"고 지적했고, "문제는 국영 식료공장에서 생산되는 당과류의 양이 모자라 값도 비싸고 쉽게 구할 수도 없다는 점"이라고 주장함.
- 이와 관련 평안북도 소식통은 "현재 장마당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당과류는 국영공장 제품보다 개인이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훨씬 많다"면서 "이번 조치는 인민의 생활형편과 시장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당국의 대표적인 강압정책의 하나"라고 비난함.

다. 경제 상황

■ 평양주민 전력난으로 큰 불편(1/11,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평양 소식통을 인용하여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조성된 미래 과학자 거리 등 고층 아파트 주민들이 승강기조차 가동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11일 보도함.
- 소식통은 "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는 최고지도자의 특별 지시로 꾸려진 곳이어서 전기공급에 우선권을 주고 있지만 승강기는 출근과 퇴근 시간에 맞춰 한 시간 정도만 반짝 가동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전력난으로 인해 수돗물 역시 하루에 한두 시간씩 아파트 동별로 교대로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고 지도자가 특별히 배려하라고 지시한 아파트의 전기사정이 이 모양이니 서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평양의 심각한 전력난을 설명함.

■ 북, 소비 위축으로 경제난 가중(1/13,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앞세우고 농산, 축산, 수산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13일 보도하면서, 이와 관련해 소식통이 "지금 공장기업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경제강국을 어떻게 건설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장마당이라도 활성화돼 '서민경제'가 살아나야겠는데 요즘은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고 전함.
- 소식통은 지난해 농사가 잘 돼 굶어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지만 인민들이 실감하는 경제난은 김정일 시대보다 더 어렵다고 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이 사회를 떠받쳐오던 중산층이 하층으로 몰락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중산층의 몰락은 장마당 장사가 위축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함.

■ 나선 수해복구 살림집 혹한에 보온 안돼(1/1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선물로 공급한 함경북도 선봉군 백학동 일대의 살림집들이 부실하게 지어져 입주민들이 추위에 떠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14일 보도함.
- 소식통은 2015년 8월 태풍 제15호 고니가 나선 일대를 강타하면서 홍수가 발생해 주민 수천 세대가 졸지에 집을 잃었고, 이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인민군 수만 명을 긴급 발동해 한달 만에 1천800여세대의 살림집을 짓게 하고, 이를 '김정은 선물'로 공급했지만 정작 이 집에 석탄과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냉방에서 추위에 시달리고 있음을 전함.

- 그러면서 소식통은 인민군대가 동원되어 집을 빨리 짓기는 했으나 속도전 바람에 바람막이도 제대로 하지 않아 추위에 매우 취약하다고 비판하였고, 건설에 사용된 지붕재료나 비닐장판도 중국에서 제공되어 질이 떨어진다고 설명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작년 1~11월 북중 교역액, 전년보다 15% 감소(1/12, 연합뉴스)

- 미국의소리(VOA)는 2015년 1~11월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이 약 49억 1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했다고 12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이 기간 중국의 대북 수출과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7%, 13% 감소했고, 특히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하나인 무연탄은 이 기간 9억6천만 달러 상당 중국에 수출돼 앞선 해보다 6.3% 줄었으며 대중 철광석 수출도 68% 감소함.
- 한편 중국은 지난해 11월 기준 북한을 상대로 약 3억4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으며,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3개월째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은 무역통계상으로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됨.

■ 안보리 제재받은 北해운사 측, "동결대상 선박 중국에 매각"(1/12, 산케이신문)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측이 선박 2척을 중국에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2일 보도하면서, OMM의 후속회사는 관리하고 있던 명산 1호 등 화물선 2척을 2014~2015년 중국 기업에 매각했다고 덧붙임.
- 신문은 이들 선박이 적정 가격의 절반 수준인 1척당 1억 엔(약 10억 2천367만원)선에 거래된 것으로 보이며 2척 모두 중국 장쑤(江蘇)성 장인(江陰)시에서 해체됐고 이후 부품이 되팔렸다고 전했고, 명산 1호는 2014년 여름에 상하이(上海)항 등 중국 항구를 드나든 것이 확인됐으나 중국은 안보리의 대북 자산 동결 조치에 따른 압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힘.

■ "작년 북러 철도 물동량, 전년 비해 4배 이상 증가"(1/13,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15년 북한과 러시아 간 철도 물동량이 전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러시아 극동철도청 공보처를 인용해 13일 보도함.
- 공보처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 연해주에서 기차 편으로 북한에 운송된 물동량은 120만t으로, 26만t이었던 2014년보다 4배 이상 늘었는데, 이는 애초 북한과 러시아가 합의한 목표량인 150만t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물동량의 대부분은 석탄(112만t)이 차지했으며, 목적지는 북한의 함경북도 나진항임.

- 국가우표발행국, 김정은의 2016년 새해 신년사 사상을 반영한 새 우표(소형전지 1종) 발행(1.14, 중앙통신·중앙방송)
- 철도성 정보기술연구소, 철도의 현대화를 위한 과학연구사업 활발히 진행(1.15,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작년 美입국 탈북난민 14명…최근 10년간 192명"(1/12,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는 최근 10년간 192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미 국무부 난민입국 자료를 인용해 12일 보도함.
- 방송은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이 2008년 38명, 2007년 28명, 2013년과 2015년 각각 14명 등 2006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92명에 이른다고 설명했으며, 2015년의 경우 14명의 미국 입국 탈북 난민의 월별 분포는 11월 5명, 7월 4명, 5월 2명, 1월과 6월, 12월 각각 1명씩이라고 밝힘.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북 사법간부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뇌물 종용(1/12,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사법당국의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상물'을 시청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12일 보도함.
- 이와 관련한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새해를 앞둔 지난해 12월 26일에도 각 도소재지들에서 '주민총회'(인민재판)를 열고 한국영화나 음악과 같은 불법영상물들을 보다 체포된 주민들에게 5년 이상의 교화(교도소)형이라는 강한 처벌을 내렸다"고 전하면서, 5년 이상의 교화형을 받은 주민들은 집과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들은 모두 농촌으로 추방했다며 추방된 가족들은 교통이 제일 불편하고 생활도 어려운 농촌지역으로 보내졌다고 밝힘.
- 그러나 소식통은 이러한 단속이 도리어 사법기관 간부들에 대한 뇌물의 액수만 올려놓았다고 지적하면서, "사법기관 간부들도 걸려든 주민들을 향해 '우리도 사람이니 그런 가혹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불법행위를 무마해 주려면 상급 간부들에게도 뇌물을 바쳐야 하고 나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오히려 걸려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함.

마. 사회 동향

■ 북 주민, 대북확성기방송 재개 사실 몰라(1/12,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일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이 "여기 국경 연선에 사는 사람들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한국이 대북 심리전방송을 다시 시작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여기까지 그런 소식이 전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음을 보도함.
- 그러면서 소식통은 주민들이 수소탄 실험으로 인해 군부대들의 특별한 움직임이나 정세가 긴장됐다고 별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며, 국경 연선의 경비와 불법휴대전화 단속은 확실히 강화되긴 했으나 국경연선 경비나 불법 휴대전화 단속 강화는 새해를 맞으며 사법기관들에서 통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수준일 뿐이어서 애써 수소탄 실험과 연관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함.

■ 국제역도연맹 "北, 세계 대회 유치 재도전"(1/15,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5일 북한이 세계 역도 대회를 유치하고 싶다는 뜻을 국제역도연맹(IWF)에 또다시 내비쳤다고 밝힘.

- 방송은 연맹의 아틸라 아담피 사무총장이 “지난달 북한역도연맹으로부터 청소년이나 유소년 대회를 개최하고 싶다는 의사를 직접 전달받았다”고 밝혔고 이에 북한 측이 약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평양의 정주영체육관 등 세계 대회를 개최할 시설을 갖췄다면서 2~3년 후 열릴 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음을 보도함.

- 기관차체육단 창립 60돌 기념 보고회, 1월 11일 진행(1.12, 중앙방송)
-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을 비롯한 전투장들에서 화선선전·화선선동을 기동적으로·집중적으로 전개(1.12, 중앙통신)
- 조선인민군 창작사에서 창작·전시(평양 김일성광장 대동강변) 한 얼음조각들의 ‘사상 예술적 형상’ 등 선전(1.14, 중앙통신)
- 마식령스키장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로 흥성이고 있다고 선전(1.15, 중앙통신)
- 北, 예술교육부문 독창·독주 및 민족음악 경연 진행(1.16, 중앙통신)

ⓒ 북한연구실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북한 SLBM 시험발사 영상은 가짜…초보적 영상 조작(1/12,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공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옴.
- 미국 싱크탱크인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CNS)의 멜리사 해넘 연구원은 "로켓이 사출되고 점화가 시작된 다음 파멸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고 11일(현지시간) 밝힘.
- CNS는 분석을 통해 미사일이 불길에 휩싸이면서 작은 부분들이 부서지면서 떨어져나가는 북한 동영상의 두 프레임을 실패의 증거로 지적함. 해넘 연구원은 "북한이 이 사실을 숨기려고 동영상을 심하게 편집했다."고 꼬집으며, "북한이 다른 카메라 각도를 사용해 발사 장면이 연속된 것인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했으나 나란히 두고 볼 때 같은 발사 장면이었다."고 설명하였음.

■ 美전문가, 북한 SLBM사출시험, 잠수함 아닌 물속 바지선서 한 듯(1/13,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21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발사는 잠수함이 아니라 '물속 바지선'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음.
- 항공우주분야 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이 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올림.
- 실링 연구원은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SLBM 사출시험 영상과 신포항에 대한 상업위성 이미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정은의 오른쪽 북한 관리의 뒤편으로 배의 선미로 추정되는 부분이 보인다. 이 이미지는 평상시 항구(신포항) 정박 시 '신포' 또는 '고래'급 잠수함 옆에 있는 지지 선박의 모습과 일치한다."고 언급함. 또한,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 시험 성공한 것처럼 보이도록 영상을 편집,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2020년 이전에는 SLBM 발사 시험에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유엔 외교관, 더 강력한 대북결의안 준비…北비핵화 요구 반영(1/14, 연합뉴스)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 성공' 주장에 상응해 과거보다 더 강력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유엔의 한 외교관이 전했음.
- 안보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 외교관은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안보리가 더 강력한 제재를 담은 대북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함. 익명을 요구한 그는 "수소탄을 실험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비록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커다란 변화(step change)"라면서 안보리의 대응법 또한 '커다란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그는 특히 15개 안보리 회원국 전체가 북한이 반드시 비핵화 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면서, 이런 총의가 새 결의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새 결의안이 나오는 시점은 앞으로 최소 3주일 후로 예상하였음.

■ 북한 실험용경수로용 냉각수로 완공 등 공사 진척 포착(1/15, 연합뉴스)

-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신축 중인 실험용 경수로(ELWR) 공사장에서 최근 냉각수로 완공 등 새로운 진척 상황이 포착돼 경수로가 가동 단계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이달 초 촬영된 인공위성 사진 판독을 통해 "지난 6개월 사이에, 특히 이달 들어" 원자로 냉각수 펌프장과 연결된 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 2개가 완공됐고, 지난해 10월 완공된 변전시설에 변압기 2기가 추가 설치됐다며 이같이 판단함.
- 다만, 언제 건물 내부 공사까지 끝나 경수로가 가동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38노스는 14일(현지시간) 강조함.

나. 미 · 북 관계

■ 北 억류 미국인 공개는 美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것<RFA>(1/12,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10월부터 억류해온 한국계 미국인을 돌연 공개한 것은 제4차 핵실험에 따른 미국의 대북 압박에 대한 대응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 RFA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간 밝히지 않던 억류 미국인을 돌연 공개한 것은 핵실험 이후 점증하는 미국의 대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하고 있다."고 전하며, 북한은 인도적 차원에서 자국민 보호에 민감한 미국 당국을 자극하고 석방 협상을 미끼로 미국과의 접촉을 노린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라고 전함.
- 앞서 CNN은 한국계 미국인 남성이 간첩 혐의로 북한에서 체포돼 감옥에 갇혀 있다고 11일 보도했음. 지난해 10월 북한 당국에 체포돼 억류된 이 남성은 올해 62세인 귀화 미국인으로, 평양에서 이뤄진 CN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김동철'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짐.

■ 美 상원도 '초당적 대북제재 강화법' 마련 돌입(1/12, 연합뉴스)

-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표결하는데 이어 상원도 초당적 제재법안 마련에 돌입하였음.
-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코커(공화·테네시) 의원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여러 건의 법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현재 상원 외교위에는 지난해 7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과 지난해 10월 공화당 대선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 등이 공동발의한 법안이 각각 계류돼 있음.
- 메넨데즈-그레이엄 안은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제재조치를 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 등이 핵심으로 알려짐.

■ 北 핵실험후 7일 연속 美에 '평화협정' 공세…왜 집착할까(1/13,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6일 제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을 상대로 연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음.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영국과 가나 인사의 김정은 신년사 지지 소식을 전하며 "미국은 조선(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함.
-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지난해 10월 유엔 연설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미국이 용단을 내려야 할 문제"라며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에 응해 나설 때가 됐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음.

-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도 국제사회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재확인시키는 동시에 미국을 향해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옴. 하지만, 전문가 대부분은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핵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북한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평화협정의 성사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음.

■ 美하원 돈줄차단 대북제재법 처리,3자제재-김정은 책임규명 포함(1/13, 연합뉴스)

-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H.R. 757)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킴.
- 이 법안은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통과되었으며, 법안은 크게 ▲조사·금지행위·처벌 규정 ▲북한의 인권유린 및 사이버안보 침해행위 제재 ▲북한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증진 조항에 관한 3개 분야로 구성돼 있음.
-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먼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임. 한편, 하원과 별개로 상원도 대북 제재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전해짐.

■ 페리 전 美국방, 北 4차 핵실험 목적은 핵무기 소형화(1/13, 연합뉴스)

-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지난 6일 감행한 제4차 핵실험 목적은 핵무기 소형화에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함.
- 페리 전 장관은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전 미 국방장관 4명 초청 미-중 관계 화상 세미나'에 참석, "북한의 수소탄 실험 주장에 회의적"이라면서도 "북한이 핵탄두를 작게 만들어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핵무기의 소형화가 가장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VOA가 전함.
- 페리 전 장관은 또 미국 핵 과학자 시그프리드 헥커가 주장한 '3노(NO) 정책'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제조하지 않고 핵무기의 성능을 강화하지 않으며 외부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실성이 적은 북한 핵 포기 대신에 당장 처한 위험을 억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3노 정책'을 북핵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했음.

■ 김정은, 美핵공격 가능하게 핵무장력 강화…국제제재에 첫 언급(1/13,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일 단행한 '수소탄 시험'과 관련해 미국이 '위협적인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핵공격으로 보복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장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음.
- 김 제1위원장은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수소탄 시험 성공' 핵과학자 등에 대한 '당 및 국가 표창' 수여식에서 "적들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위협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세력에게 핵공격을 가할수 있게 핵무장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음.
- 김 제1위원장은 이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악착한 경제봉쇄와 군사적압박으로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려고 피눈이 되여 사면팔방으로 달려들고 있다."면서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는 강인담대한 정면돌격전을 벌려 적들이 최강의 핵보유국인 우리를 똑똑히 알게 하여야 한다."고 덧붙임.

■ 오바마, 마지막 연설문서 '북한' 뺐다…의도적 무시 전략(1/13,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신년 국정연설문에 의외로 '북한'이라는 낱말이 빠진 것으로 알려짐. 그동안 어떤 식으로든 북핵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했던 워싱턴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무(無) 언급'이 오히려 뉴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신년 국정연설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2014년 이후 3년째로, 현재로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정확한 경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일각에서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는 초안 작성과정에서 북핵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문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뺐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오바마, 어떤 나라도 우리와 동맹 공격 엄두 못내…파멸의 길(1/13,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에서 "어떤 나라도 감히 우리와 우리의 동맹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며 "그것이 파멸에 이르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 이날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처럼 미 국력의 우위와 동맹을 강조함으로써 최근 북핵도발 등에 엄중한 경고를 던진 것으로 보임.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해 국정연설에서 "우리의 적이 강해지고 미국이 약해지고 있다는 모든 말들은 허풍이며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며 이같이 강조했음.

■ 미국인 57%, 군사행동 포함 대북 강경대응 지지<VOA>(1/13, 연합뉴스)

-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북한의 추가 핵개발을 막기 위해 군사행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함.
-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라스무센리포트가 핵실험 직후인 지난 6~7일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유엔과 국제사회가 군사행동을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7%가 '그렇다.'고 답했음.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20%에 불과했고 나머지 23%는 '모른다.'고 답함.
-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12%가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을 나타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항목을 택한 응답자도 30%에 달했으며, 응답자의 72%는 북한을 미국의 적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미국 '평화협정' 외면은 국제 범죄행위 주장(1/14, 연합뉴스)

- 북한은 14일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외면하는 것은 대북 적대시 정책에 기반을 둔 '국제범죄' 행위라고 비난했음.
- 북한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백서에서 "조미(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한사코 반대하고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고 발광하는 미국의 책동은 위험천만한 국제범죄이며 평화관계 수립의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국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음.
- 백서는 "오늘의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정전협정을 환원복구할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으로 교체할 것을 절실히 요구한다."며 "평화협정 체결은 조선반도만이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규정함.

■ 미국 ISIS, 북한 영변 원자로 저출력·간헐적 가동(1/14, 연합뉴스)

-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5㎿급 흑연감속로를 꾸준히 가동하고 있으며, 우라늄 추출을 위한 원심분리기 역시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음.
-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11일 촬영된 사진에서 원자로 배수관에서 온배수가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발표했음.
-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ISIS 소장은 2014년 말부터 지난해에 걸쳐 촬영된 사진에는 원자로에서 온수를 배출하는 모습이 담긴 적이 있었다며, 영변 5㎿ 원자로가 "저출력 또는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함.

■ 미국, 북한 핵동결 결단한 이란의 길 따르길(1/16, 연합뉴스)

- 미국은 핵프로그램 동결 결단을 통해 핵협상 타결의 길을 연 이란의 사례를 따를 것을 북한에 제안하였음.
-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이란의 방향을 고려하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블링큰 부장관은 "이란 핵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협상가들이 포괄적인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핵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어떤 면에서 핵프로그램을 뒤로 물리기로 한 이란의 몇 년 전 결정 때문"이라고 부연함.
- 이는 결국 북핵 협상을 위해 북한이 핵프로그램 동결 등의 선제적 조치를 결단해야 한다는 지적임. 그러면서 "북한이 진지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보다 폭넓은 현안에 대한 대화의 잠재적 가능성(potential)이 있다." 덧붙임.

다. 중·북 관계

■ 대북제재 '투트랙'…수위 기존보단 높지만 '한반도안정' 우선(1/11, 연합뉴스)

- 국제사회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정부의 대응 방향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음.
-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은 하되 북한에 치명상을 입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는 수준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할 것으로 보임.

- 대북 소식통은 11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지만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스탠스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음.

■ 中 백두산에 방사능검측지휘부 설치…北中 접경서 대대적 조사(1/12, 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의 ‘수소탄’ 실험 장소와 가까운 백두산 지역에 방사능 오염 측정을 위한 검측지휘소를 설치하고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방사능 조사에 나섰음.
- 12일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부는 지난 6일 북한 핵실험 직후 긴급 대책을 가동, 주요 관측소에 동북지방 및 주변 지역, 접경지역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등지에서 방사성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이어 지난 7일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창바이산(長白山·백두산의 중국식 명칭)관리위원회가 있는 얼다오바이허(二道白河)진에 방사능 감측을 위한 긴급지휘부를 설치함.
- 북한 핵실험 이후 인접 지린(吉林)성 일대 주민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방사능 유출 등에 대한 우려와 동요를 진정시키고 향후 대북제재의 명분 쌓기를 위한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中, 대북제재 강경기류에 ‘신중론’…한 눈 팔아선 안돼(1/12, 연합뉴스)

- 중국정부는 국제사회가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급한 일’은 북핵 문제를 대화 궤도로 되돌려놓는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음.
-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국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현재 상황을 처리하는 데 있어 당연히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추진이라는 목표에 눈을 둬야 한다.”고 말했음.
- 또 “국제 핵 비확산 메커니즘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급한 일은, 각국이 함께 노력해 조선반도 핵 문제를 대화·담판의 궤도로 되돌려 놓고 조선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음.

■ 中서 반북·혐북정서 확산…대북제재에 압도적 찬성(1/12, 연합뉴스)

-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 내에서 반북(反北), 혐북(嫌北) 정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이 강행된 6일 이후 12일 현재까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총 5건의 설문조사를 진행 중임.
- 이 설문조사에서 중국인 10명 가운데 8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추진 중인 새로운 대북 제재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총 4천900여명의 응답자 가운데 82%(4천3명)가 대북 제재를 '지지한다.'고 답변한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8%에 불과함.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느냐'는 설문조사에서는 4만2천500여명의 응답자 중 81%(3만4천523명)가 위협이 된다고 답변했음.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지도부는 여론 동향에 상당히 민감한 편이어서 일반 중국인들의 이 같은 여론이 제재조치를 포함해 대북 정책을 펴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 中 언론, 北, 중국산 사용 금지령은 헛소문…북중 안정 강조(1/14, 연합뉴스)

- 중국 관영 언론이 최근 중국 안팎에서 퍼진 '북한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는 소문에 대해 '헛소문'이라고 일축함.
-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소문은 중국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한 누리꾼이 "북한 정부가 전국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사용금지령을 내린 사실을 북한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고 함.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최근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 북한 중앙정부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산 제품을 일절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규찰대가 나서 중국산 사용여부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 중국 관영언론의 이런 보도는 북한 핵실험 이후 빠르게 확산되는 반북(反北), 혐북(嫌北) 정서를 '톤다운'하고 북중 관계의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됨.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우선시하며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 中, 북핵실험, 방사능 오염 없다 결론…긴급대응 해제(1/14, 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 후 대대적인 환경조사를 벌인 결과 자국에 대한

방사능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림. 이에 따라 가동했던 긴급 대응시스템은 해제했지만, 정상적인 모니터링 조치는 계속해 나가기로 함.

- 관영 신화통신은 14일 중국 환경보호부의 방사능감측 긴급지휘부를 인용, 현재까지 동북 변경 및 주변 지역의 방사능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고 인공 방사능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도함.
- 판쑤(潘蘇) 환경부 핵시설안전감독관리사 처장은 "북중 변경지역의 환경감측소 37곳과 감측차량 14대를 동원해 모니터한 결과 관련 데이터는 모두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며 이번 핵실험이 중국의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정상적인 감시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힘.

라. 일 · 북 관계

■ 일본, 방북 경력 핵·미사일 기술자 재입국 금지 검토(1/13, 연합뉴스)

-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4년 북한과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합의한 이후 완화한 규제를 원상복구하는 것 이외에도 재입국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직원과 핵·미사일 기술자를 재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으로,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자금 반입이나 핵 기술 전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 북한 국적자의 왕래 ▲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 대북 현금 반출 신고 기준을 현재 100만 엔 이상에서 대폭 낮추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음.

마. 러 · 북 관계

■ 작년 북러 철도 물동량, 전년 비해 4배 이상 증가(1/13, 연합뉴스)

- 지난해 북한과 러시아 간 철도 물동량이 전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러시아 극동철도청 공보처를 인용해 13일 보도함.
- 공보처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 연해주에서 기차 편으로 북한에 운송된 물동량은 120만t으로, 26만t이었던 2014년보다 4배 이상 늘었지만, 이는 애초 북한과 러시아가 합의한 목표량인 150만t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물동량의 대부분은 석탄(112만t)이 차지했으며, 목적지는 북한의 함경북도 나진항임. 이 같은 북러 간 물동량 증가는 남한과 북한, 러시아 3개국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러시아가 북핵 실험 강경 대응에 미온적인 이유는?(1/14, 연합뉴스)

-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과 미국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관련국들의 인내와 자제를 거듭 촉구하고 나서 주목됨.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3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발표한 '수소탄' 실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인내심을 유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긴장 고조를 초래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힘.
-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앞서 지난 6일 북한 핵실험 직후 긴급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 앞서 "국제사회는 냉정하고 비례적으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발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함. 이는 러시아가 북핵 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 채택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측의 강력한 제재안에 제동을 걸 가능성을 시사 하는 것이라 생각됨.

바. 기타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연합사령관, 北도발 대비 최고수준 대비태세 유지(1/11, 연합뉴스)

-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11일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음.
-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이순진 합참의장과 함께 경기도 오산에 있는 공군 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사령부를 방문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군 관계자가 밝힘.

- 이순진 의장과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이날 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공군의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기 위함임.

■ 워싱턴서 '사드 한반도 배치론' 군불…전직 국방 "한국에 중요"(1/13, 연합뉴스)

-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음.
- 빌 클린턴 행정부 2기 미국의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엄 코언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비영리기구인 미·중관계 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고려하고 한국과 일본도 사드 도입을 고려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워싱턴에서 국방분야와 관련한 상담과 로비 활동을 하는 코언 전 장관은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며 "그러나 우리와 우리의 동맹들이 북한이 개발 중인 미사일기술 개발을 격퇴할 수 있는 방어능력을 갖추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했음.
-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맥 손베리(공화·텍사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핵실험 이튿날인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반드시 한국과 공조해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미국 본토에서도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한미일 공조복원 탄력…'중국견제'는 여전히 韓외교 딜레마(1/16, 연합뉴스)

-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는 세 나라의 공조 복원에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되고 있음. 북핵에 초점을 맞춘 지난 13일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서울)가 있었지만 북핵 뿐 아니라 다른 지역 안보 현안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한미일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군위안부 타결 이후 이번이 처음임.
- 실제로 세 나라는 이날 협의를 통해 대북 압박에 대한 '단일대오'를 확인하는 한편 중동 정세, 사이버 안보, 보건,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도 공조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한미일 공조 복원이 시작됐음을 국제사회에 알림.
- 하지만 한미일 3각 공조 복원과 관련한 세 나라의 지향점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한국으로선 여전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딜레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블링큰 부장관과 사이키 차관은 모두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했지만 임 차관은 언급하지 않은 데서도 중국을 보는 한국과 미·일 사이의 입장 차이를 보임.

나. 한 · 중 관계

■ 中, B-52 한반도전개·확성기에 우려 표명…절제·신중(1/11, 연합뉴스)

- 중국정부는 미국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난 10일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진입시킨 데 대해 '절제'와 '신중한 행동'을 강조함.
-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는 유관 각국이 능히 절제하고 신중하게 행동해 긴장상황이 악순환하는 것을 피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또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임.
-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우려를 표명했음. 훙 대변인은 "사태의 발전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각국은 마땅히 함께 노력해 긴장 상황이 악순환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각국이 신중하게 행동해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함께 수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 中기관지, 北죽이는 제재엔 반대…韓, 美넓적다리 껴안지마라(1/13, 연합뉴스)

- 중국 관영언론은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대해 "중국은 북한정권 '죽이기식' 안보리 결의에는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함.
- 중국 당국의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 (環球時報)는 이날 사설에서 "중국은 반도(한반도)에서 핵을 제거해야 하며 동시에 대문 앞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힘. 다만, 중국은 핵재료들이 북한에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에는 동의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배치는 '북한 압박' 외에도 중국 겨냥이라는 전략적 의미가 담겨있다며 특히 미국이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이루게 되면 중국에 대한 위협 수단을 또 하나 얻게 된다고 우려하였음.

■ 한중 6자회담 수석회담, 대북제재 수위 접점모색…소통계속(1/14,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만나 대북 제재 문제를 비롯한 북핵 대응방안을 협의함.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4일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담 및 만찬회동을 가졌음.
- 이번 회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놓고 한미일과 중국 간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접점'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양국은 이를 위해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짐.
- 황 본부장은 전날 이뤄진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의 엄중함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강하게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우 대표는 안보리 조치가 '합당한 대응'이 돼야 한다며 과도한 수위의 제재에는 난색을 표명하면서 6자회담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짐.

■ 주일中대사, 중국, 朴대통령 얘기 중시…북핵 적극대응 시사(1/14,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을 중국이 중요한 메시지로 생각한다고 중국 대사가 14일 밝힘.
-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는 "박 대통령의 이야기에 관해서는 중국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같은 이웃국가로서 마찬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함.
- 연합뉴스가 이날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의 한 호텔에서 청 대사를 만나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자 그는 "핵무장은 절대로, 단호하게 반대한다. 또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안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하였음.

■ 中,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참여…한중 국방정책회의서 밝혀(1/15, 연합뉴스)

- 중국은 15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 이번 국방정책실무회의에는 한국 측에서는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중국 측에서는 관요페이(關友飛)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음.

-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와 9·19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안보리 제재 결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고 윤 국제정책관이 설명함.
-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안보리 제재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임. 중국은 과거 북한의 1~3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에도 참가했음.

■ 한중, 北에 명확한 대응 의견일치…제재수위 접점찾기 시동(1/15, 연합뉴스)

- 중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해 ‘한중 간의 긴밀한 소통·대응’을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한국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표명함. 중국은 또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명확한 대응’, ‘새롭고 강력하고 적절한(適當) 제재’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
- 15일 중국을 방문 중인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따르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전날 진행된 양자회담에서 “한중 간에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응해나가겠다.”고 언급함.
- 우 대표는 또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명확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우리 측과 의견을 같이했고, 안보리 결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황 본부장은 전함.

■ 한미일, 응답하라 중국…강력한 대북제재 동참 압박(1/16, 연합뉴스)

- 한미일이 16일 도쿄에서 열린 3국 외교차관 협의를 통해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음. 과거와 다른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는 것임.
- 이날 한미일이 내고자 한 첫 번째 메시지는 물론 북한이 추가 도발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국제사회의 ‘단일대오’를 촉구하는 것이었음.
- 특히 이날 미국 대표로 참석한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 한국을 거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협의에는 중국에 제시할 한미일 차원의 대북 압박 카드를 만들고 그것을 중국이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는데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봄. 협의 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세 차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의 제재 동참을 촉구하였음.

다. 한 · 일 관계

■ NHK여론조사, 일본인 64%, 위안부 합의 긍정평가(1/12, 연합뉴스)

- 일본 공영방송인 NHK 여론조사 결과 일본인 64%가 한일 간 군위안부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NHK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응답자 1천 43명)에서 지난달 28일 도출된 합의에 대해 14%가 '대단히 평가한다,' 50%가 '어느 정도 평가한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64%에 달했음. 반면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는 답과 '별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답은 각각 6%와 22%에 그침.
- 한일 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합의했음에도 향후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현안이 되는 일이 있을 지 여부에 대해 59%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고 8%만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음.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답은 26%였다고 전해짐.

■ 한일, 군위안부 합의 동력 삼아 경제협력 진전시키자(1/12,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은 군위안부 문제 타결을 발판삼아 양국 간 경제협력을 진전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 했음.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차관보급)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은 12일 오후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함.
- 이번 회의는 올들어 처음 열린 한일 고위급 협의이자 지난해 '12·28' 군위안부 합의 이후 양국의 고위급 경제협의 채널이 처음으로 가동된 자리였음.
- 외교부에 의하면, 양측은 최근 감소 추세인 양국 간 물적·인적 교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함. 또 한국 측은 작년 11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청년인재교류 활성화, 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고, 일본 측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고 전해짐.

■ 韓해군·日자위대 지난달 아덴만서 연합훈련…한국 비공개요청(1/13, 연합뉴스)

-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달 아덴만에서 함께 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산케이(産經)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해군과 해상자위대는 작년 12월 23일 소말리아와 예멘 사이에 있는 아덴만 해역에서 연합 훈련을 벌임.

- 양측이 함선 1척씩을 동원해 통신훈련, 전술 운동 등을 하며 해적 대처 능력을 향상을 도모했고 훈련은 '친선 교류'를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신문은 전함. 애초에 미국 해군도 참가해 3국 훈련을 하는 방안이 조율됐으나 미국 구축함이 다른 임무에 파견돼 양국 간 훈련으로 실시되었음.
- 친선 훈련은 끝나고 나서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일본 정부는 이번 훈련에 관해 밝히지 않았으며 자위대에 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한국 해군이 해상자위대에 공표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산케이는 덧붙임.

■ 아베, 北위협 있을수록 한일·한미일 협력 중요(1/13,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3일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한일,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한국 국회의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 핵실험은 일한 양국의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협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음.
- 아베 총리는 이어 "이런 상황일수록 일한·일한미 협력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의 가교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서청원 의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협력을 부탁하고 싶다."고 밝힘.

■ 日집권당 사쿠라다 의원, "위안부는 매춘부" 망언…韓日합의 훼손(1/13, 연합뉴스)

- 군위안부 합의가 나온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일본 집권 자민당 국회의원이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는 망언을 함.
-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66) 중의원 의원(6선)은 14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외교·경제 협력본부 등의 합동회의에서 군위안부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매춘부였다."며 "그것을 희생자인 양 하는 선전 공작에 너무 현혹당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이 같은 망언은 군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 사실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작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간 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일개 국회의원의 무지몽매한 망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함.

■ 위안부는 매춘부 망언 日국회의원 "발언 철회"(1/13, 연합뉴스)

- 일본 집권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66) 중의원 의원(6선)은 "군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함.
- 교도통신에 의하면, 사쿠라다 의원은 14일 자신의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 발표한 코멘트에서 "오해를 부른 점이 있었다."며 철회한다는 뜻을 밝힘. 사쿠라다는 또 "폐를 끼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말함.
- 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자민당 개별 의원의) 발언 자체를 봉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정부의 생각, 당의 생각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자민당원이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면 그런 것에 입각해 발언을 하면 좋겠다."고 언급함.

■ 일본 정부, 한국 요청 시 통화 스와프 체결 방침(1/14,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요청하면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을 다시 체결할 방침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일본 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14일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의 경기 후퇴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으며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면 경기 악화의 영향이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짐.
-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신청을 하면 융통 상한액 등을 검토하며 협의 후 국제회의 등을 계기로 열릴 한일 재정장관 회담이나 정상회담에서 조인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산케이는 전함.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측은 통화스와프 협정을 다시 체결해 한국과 일본 간의 거리를 더 좁히려는 구상도 하고 있으나 비공식 타진에는 응하지 않고 한국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협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덧붙임.

■ 아베, 협한시위, 일본인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워(1/14,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3일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한일,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한국 국회의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 핵실험은 일한 양국의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협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음. 이어 "이런 상황일수록 일한·일한미 협력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의

가교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서청원 의원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협력을 부탁하고 싶다."고 밝힘.

- 또 서 의원이 "헤이트스피치(혐한시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법적으로 규제를 해 달라"고 하자 아베 총리는 "헤이트스피치 문제는 일본인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확실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짐.

■ 아베, 日정부·여권인사는 한일합의 입각해 발언하라(1/14,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군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집권 자민당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의원의 망언과 관련, 한일 합의에 입각한 발언을 하라고 일본 정부·여당 인사들에게 주문함.
- 아베 총리는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쿠라다 의원의 발언에 대한 민주당 미즈노 겐이치(水野賢一) 의원의 질의를 받고 "(군위안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를 극복하면서 이번에 일한 정부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음을 확인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음.
- 아베 총리는 이어 "여러 발언 자체를 봉쇄하지는 못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와 여당 관계자는 이것(위안부 문제를 최종 해결한 한일 간 합의)에 입각해 향후 발언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전해짐.

■ 日오사카시 혐한시위 억제 조례 제정…日 지자체 최초(1/15, 연합뉴스)

- 재일 한국·조선인을 겨냥한 '혐한(嫌韓)' 시위를 억제하는 조례가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오사카(大阪)시에서 처음 제정됨.
- 교도통신에 의하면, 오사카 시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억제 대책을 담은 조례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함. 오사카유신회, 공명당, 공산당 등의 의원들이 찬성했고 자민당 의원들은 반대한 것으로 전해짐.
- 조례는 헤이트 스피치를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사회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장소 또는 방식으로 비방·중상하는" 표현 활동이라고 정의했음. 여기에는 인터넷에 혐오 시위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포함됨. 이 조례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는 제도를 마련한 첫 사례여서 다른 지방과 중앙 정부의 규제 조치로 확산될지 주목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中, B-52 한반도전개에 경계감…美, 북핵구실로 근육자랑(1/12, 연합뉴스)

- 미군의 전략무기 'B-52' 장거리 폭격기가 10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한 데 대해 중국 측이 경계감을 드러냈음.
-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11일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것은 동북아 지역의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음. 또 만약 미국이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폭격기를 띄운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며 "조선(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에 '아시아태평양 회귀 전략'에 새로운 구실을 제공했다."고 덧붙임.
- 신화통신과 중앙(CC)TV 등 중국 관영매체들도 전날 미군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전개 사실을 긴급뉴스로 보도하며 촉각을 곤두세웠음.

■ 美, 필리핀에 군사교두보…中과 남중국해 대립 격화될 듯(1/12, 연합뉴스)

- 미국과 필리핀 정부가 맺은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이 12일 필리핀 대법원의 합헌 결정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사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이 협정의 골자는 미군의 필리핀 군사기지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것임. 상시 주둔 형태는 아니지만 미군 병력의 장기 배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미국과 필리핀은 이날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EDCA의 조속한 실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임.
- 미국과 필리핀이 이번 합헌 결정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행보와 맞물려 이 지역의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남중국해에 1만2천t급 초대형 경비함 배치…주변 우려고조(1/13, 연합뉴스)

- 중국이 76mm 속사포와 헬리콥터까지 갖춘 1만 2천t급의 초대형 경비함을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에 배치할 움직임으로 보이자 관련국들의 우려가 커졌다.

-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환구시보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배수량 1만t급의 초대형 경비함(CCG 2901)을 남중국해에 배치한 중국은 이보다 큰 초대형 경비함(CCG 3901)의 건조를 사실상 끝내고 같은 수역에 배치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배치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 미 해군대학 중국해양연구소의 라이언 마틴슨 연구원은 중국 경비함들의 화력 강화에 주목하고 있음. 기껏해야 물대포와 사이렌 정도만 갖췄던 남중국해 배치 중국 해경함대가 이제는 세계 최대의 초대형 경비함까지 운용하게 됨으로써 미 해군에게는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왔다는 지적임. 한편,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중국 해경 소속 경비함정 사용 행태를 '중간지대(gray area)'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행태는 무력충돌이 아닌 '창조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中학자들, 대북제재 너무 강하면… 한미일과 뚜렷한 온도차(1/14, 연합뉴스)

- 한·미·일이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 회동을 계기로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강력히 응징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대북제재의 키를 쥔 중국 측은 여전히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14일 예정된 한중 6자회담 수석 대표 회동에서도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주장하는 한국과 '한반도 평화 안정 수호'를 최우선 순위에 둔 중국이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됨.
- 중국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 위험성보다는 미국이 북한의 이번 도발을 계기로 한반도 사드 배치 등을 통해 대중 포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고 일본이 군사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안보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고 전해짐.

■ 전례 없이 중국 압박하는 미국…블링큰·장예쑤이 '담판' 촉각(1/15, 연합뉴스)

- 14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되는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아시아 방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동선은 중국 베이징 방문임.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의 수위와 폭이 판가름 나는 미·중 간의 '담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임.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블링큰 부장관이 일본과 한국, 미얀마에 이어 내주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힘. 블링큰 부장관은 방중 기간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블링큰 부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찾는 것은 이미 대북 제재에 대한 한·미·일의 기존 협력체제를 다지는 것 외에는 실질적 측면에서 큰 의미는 없어 보임. 그러나 중국은 대북 제재의 실효성 확보에 결정적 존재이기에 이번 방중이 갖는 의미는 중요할 수밖에 없음.

■ 존 케리 美국무, 27일 방중…대북제재 미·중 '담판' 주목(1/15, 연합뉴스)

- 미국 외교의 사령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27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임.
-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케리 장관의 방중 일정을 공식 발표하고 "중국 정부 지도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양자와 지역, 글로벌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케리 장관의 방중에 앞서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 20~21일 베이징을 방문해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사전협의를 가질 계획임.
- 국무장관과 국무부 '2인자'인 부장관이 일주일 간격으로 특정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이는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적극 설득하기 위해 미국이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됨.

■ 미, 중국과 무력충돌 피하려면 군사 부문 관계강화 필요(1/15, 연합뉴스)

- 미국이 중국과 무력충돌을 피하려면 경제 협력 못지않게 군사 부문에서도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14일(현지시간) 미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해럴드 브라운, 윌리엄 패리, 윌리엄 코언, 척 헤이글 등 4명의 전직 국방장관들은 지난 11일 개최된 전국미중관계위원회(NCUCR) 행사에서 미국과 중국이 문화적 이해를 개선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장교와 정보 교환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함.
- 이들은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들이 미 육사 같은 교육기관에서 연수하는 방안이 좋은 사례라고 언급함. 지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국방장관을 지낸 코언은 또 미국이 예전처럼 중국군 관계자들을 태평양 지역의 군사훈련에 초청해 참관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아태 지역의 군사령관들을 신뢰 구축의 선봉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음.

바. 미 · 일 관계

■ 백악관, '북한 무시전략' 확인…韓日과 미사일방어 강화 논의중(1/13, 연합뉴스)

-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음.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다자 제재와는 별개로 미국 자체의 독자적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빌딩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배경을 묻는 질문에 "북한 지도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음.
- 그는 "현재 유엔 안보리를 통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데 필요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조치들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는 성장과 번영의 모델이 아니어서 대규모 제재의 타깃이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가하는 제재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한국, 일본과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함.

■ 아베, 미국·유럽 방문해 G7정상회의 의제 조율한다(1/17,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5월 자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주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3월말 미국을, 4월말~5월초 유럽을 방문할 방침이라고 NHK가 17일 전함.
- 아베 총리의 잇따른 미국, 유럽 방문 계획은 오는 5월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G7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의제를 각국 정상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목적임.
- 아베 총리는 먼저 3월 31일과 4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으며, 미국 방문 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까지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짐.

사. 미 · 러 관계

■ 미국-러시아 외무, 북한 핵실험 대응방안 논의(1/12, 연합뉴스)

-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힘.

-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언론보도문을 통해 미국 측의 요청으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간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면서 "두 장관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함.
- 보도문은 상세한 논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문제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됨.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발표한 지난 6일 논평에서 "북한의 핵실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국제법 규정과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심각한 위반"이라며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를 지지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음.

아. 중·일 관계

■ 日언론, 중국의 진심 뭔가…대북억지력 행사해야(1/11, 연합뉴스)

-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음.
- 중국이 지난 6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핵실험에)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는 등 강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후 신중 모드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따른 것임. 특히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8일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대화'를 언급했다.
- 이에 대해 도쿄신문은 11일 '중국의 진심을 주목한다.'는 분석 기사에서 "북한은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한다."며 "중국이 '억지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중국 책임론'이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함.

■ 中日 군사력 각축장 지부티…日자위대 거점 강화·中신규진출(1/13, 연합뉴스)

- 아프리카 동부 국가 지부티가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지부티는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해역에 접한 곳이며 양국 모두 해상교통로로서의 중요성이나 해적 퇴치 등을 명분으로 현지 군사·방위 거점에 의욕을 보이고 있음.
- 1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와 관련해 "지부티의 거점을 한층 활용하는 방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제 평화협력 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며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활동을 한다는 관점"이라며 이같이 언급함.

- 일본은 해상 수송로인 지부티 인근 해역의 해적 출몰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했으나 이에 더해 현지 기지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거점 기능을 보강할 것으로 예상됨.

■ 日 대만 정권교체 반색…협력과 교류 심화해 나갈 것(1/17,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지난 16일 밤 담화를 통해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주석이 당선된 데 "차이잉원 주석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대만은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소중한 친구"라고 언급함.
- 이어 "(총선 결과는) 대만에서 민주주의가 깊이 착근했음을 보여준다."며 "일본과 대만간의 협력과 교류가 한층 심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음. 기시다 외무상의 이런 담화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기본적으로 대만과의 관계강화를 지향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
- 무엇보다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하는 일본으로서는 대만의 우군화를 통한 중국 견제가 긴요하기 때문임.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 내에서는 중국이 참가하지 않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만의 참가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17일 전함.

자. 중 · 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차. 일 · 러 관계

■ 日집권당 간부, '북핵 문제' 아베 친서 들고 러시아 방문(1/13,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등과 관련해 러시아에 정부여당 고위인사를 보내 공조를 시도하고 있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부총재가 10일(현지시간) 오후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도착했음.
-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세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하원 의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러시아 요인을 만나 북핵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됨. 고무라 부총재는 특히 북한 문제에 관해 아베 총리가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지니고 있어 푸틴 대통령을 직접 예방할지가 주목됨.

- 그의 러시아 방문은 당면한 북핵 문제 외에도 쿠릴 4개 섬(북방영토) 영유권이나 러일평화조약 체결 등 양국의 현안을 논하고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도 보임.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소비 위축으로 경제난 가중(1/13, 자유아시아방송)

- 새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경제 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한다"고 역설했음.
- 핵실험을 자축하는 북한의 군중대회에서도 '경제 강국건설' 구호는 빠지지 않았음.
- 하지만 북한의 현지 소식통들은 "김정은이 제시한 경제강국은 구체적 내용이 없는 빈 구호놀음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금처럼 앞뒤가 꽉 막힌 경제를 도대체 어떻게 발전시킨다는 것인지 방법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음.
-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앞세우고 농산, 축산, 수산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했지만 이는 김일성 시대부터 인민들이 지겹게 들어온 말인데 "그중 제대로 실현된 것이 무엇이 있냐"고 소식통은 반문했음.
- 이와 관련 12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금 공장기업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경제 강국을 어떻게 건설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장마당이라도 활성화돼 '서민경제'가 살아나야겠는데 요즘은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음.
- 지난해 농사가 잘 돼 굶어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지만 인민들이 실감하는 경제난은 김정일 시대보다 더 어렵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음.
- 한편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그나마 이 사회를 떠받쳐오던 중산층이 하층으로 몰락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중산층의 몰락은 장마당 장사가 위축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전했음.
- 북한에서 중산층은 웬만큼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장사꾼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중국 장사꾼들이나 무역기관들로부터 도매가격으로 식량과 생필품을 넘겨받아 주민들에게 소매가격으로 팔아왔다고 그는 덧붙였음.
- 소식통은 그러면서 "돈이 말라버린 서민들이 생필품을 사지 못하면서 중산층들(장사꾼들)은 재고상품을 처리하지 못해 큰 손해를 보고 장사를 접는 실정"이라며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장마당 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하던 중산층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강조했음.

■ 나선 수해복구 살림집 혹한에 보온 안돼(1/1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선물로 공급한 함경북도 선봉군 백학동 일대의 살림집들이 부실하게 지어져 입주민들이 추위에 떠는 것으로 알려졌음.
- 최근 나선지방을 다녀온 한 중국 상인은 "백학동 지구에 건설된 살림집들은 천정과 바닥으로 냉기가 스며들어 입주자들이 떨고 있다"고 밝혔음.
- 2015년 8월 태풍 제15호, 고니가 나선 일대를 강타하면서 홍수가 발생해 주민 수천 세대가 졸지에 집을 잃었음.
- 그러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인민군 수만 명을 긴급 발동해 한 달 만에 1천800여세대의 살림집을 짓게 하고, 이를 '김정은 선물'로 공급했지만 이 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이 겨울에 떨고 있다는 것임.
- 이 중국 상인은 "인민군대가 언제 집을 제대로 지어봤겠는가?"면서 "경험도 없는 군대들이 온돌을 깔고 일부 주택은 전기 난방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석탄과 전기가 없어 주민들이 냉방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다"고 말했음.
- 그는 "집들은 겉을 보면 번지르르 하지만, 한 달 만에 지은 집이 어떻게 좋을 수 있냐"면서 중국 사람들도 북한의 건설 속도에 대해 황당해 한다고 말했음.
-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함경북도 선봉군 지역의 평균 기온은 영하 10도로, 새벽에는 최고 영하 16도를 기록하고 있음.
- 그는 이 살림집 건설에 사용된 지붕재료나 레자(비닐장판)도 중국에서 제공되었다면서 나선에 투자한 중국 상인들도 상당부분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음.
- 소식통은 "당시 선봉군 일대가 크게 피해를 본 것은 큰 비가 내려 물을 가두어 두었던 저수지 둑이 터졌고, 그 물이 순식간에 시내를 덮쳐 수천 세대의 집이 무너졌다"면서 "미처 피하지 못한 수백 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음.
- 하지만 북한당국은 군대를 투입해 시신 수습을 정리할 사이 없이 현장을 신속히 정리하고, 그 자리에 또 집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음.

■ 北·中, '불법 월경자 사살 지시' 국경경비 대폭 강화(1/15, 데일리NK)

- 중국과 북한이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탈북자 지원 단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미 의회 산하 위원회가 밝혔음.
-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중국위원회(CECC)는 지난 10월에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2014년 가을에서 2015년 가을 동안 북·중 국경 지역의 경비가 한층 더 강화됐다"고 전했음.

- 보고서는 이어 “중국 국경수비대는 모든 불법 월경자들을 사살하라는 새로운 지침을 받았고, 새로운 철조망도 설치했다”면서 “국경 지대 단속 강화로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음.
- 이어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될 경우 고문과 구금,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음에도 중국 당국이 지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탈북자들을 북송했다”면서 “이는 중국이 비준한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음.
-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 당국이 지난해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고 밝혔음.
-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외국 구호기관과 기독교 선교사들, 한국 교회들, 비정부기구들이 탈북자들의 이동을 지원해 왔지만 단속 강화로 지난해 많은 지원 단체들이 중국 내 활동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음.
- 따라서 이러한 악화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협약들을 근거로 탈북 여성들과 어린이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변화를 강하게 촉구했음.

■ 북한 해외파견 의사 ‘엉터리’ 많아(1/15, 자유아시아방송)

- 외국에 파견되는 북한 의사들 가운데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업종에 취업하는 ‘8.3 의사’, 즉 ‘엉터리 의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연락이 닿은 한 북한 주민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북한 의사들도 벌이가 시원치 않아 ‘외국에 나가 한탕 벌자’는 희망이 커졌다”면서 “하지만, 외국에 나가자면 경쟁이 치열해 전공을 속이고 나가는 ‘8.3 의사’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음.
- “북한 의사들은 하루 병원에 출근해봤자, 담배 세 갑 벌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 한번 나가 버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는 말했음.
- 그나마 북한 체제 선전이나 외국에서의 대처요령 같은 교육을 받는 데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북한 의사들의 수준이 형편없다는 것임.
- 북한 보건당국은 아프리카나 중동의 우호적인 국가들과 보건협정을 맺고, 북한 의사들을 취업 형식으로 모집해 파견하고 있는데, 북한 의사들은 보통 뇌물로 200달러를 건네야 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북한은 11년제 의무교육제도 혜택으로 북한에 의사들이 많고, 교육수준도 높다는 점을 선전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의사취업 비자도 어렵지 않게 따내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음.
- 북한의사들이 진출하는 국가는 대부분 아프리카와 중동의 발전 도상국가들로, 해당 국가는 의료체계가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음.
- 북한에서 의사를 지냈던 탈북자도 "2000년대에도 의사들이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 중에는 외국에서 의료사고를 내고 강제 추방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했음.

■ 영국의회, 북한 여성문제 관련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1/17, 노컷뉴스)

- 영국 의회 초당파 모임인 북한그룹 (APPG-NK)이 다음달 22일 '북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 제기'란 제목으로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음.
-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이 그룹은 성명에서 "정치인들과 정책 결정자들, 민간단체 대표, 탈북 여성 피해자, 전문가 등 150명이 북한 여성들의 권리에 대한 고질적이고 극단적인 폭력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음.
- 성명은 "북한이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지만, 이러한 차별이 오히려 국가 정책에 기반해 있고 북한 정부는 유엔기구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개선 압박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어 "북한이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지만, 이런 차별이 오히려 국가 정책에 기반 해 있고 북한 정부는 유엔기구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개선 압박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번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유엔기구들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지역기구들, 여성보호단체, 법률단체 등 다양한 단체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임.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여성 차별이 북한사회에 만연돼 있으며, 특히 성폭력과 고문, 강제 낙태, 인신매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음.

2. 북한인권

■ "핵실험 맞설 수단은 북한인권법"(1/12, 자유아시아방송)

- 남한에서 지난 1월 11일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선거구

확정안'을 포함해 여가가지 쟁점 법안을 놓고 재협상을 하고 있음.

- 북한인권법안도 쟁점 법안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으나 "회기 내 북한인권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반응임.
- 하지만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은데,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에 맞서 남한이 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북 압박 조치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인권법의 제정이라는 것임.
-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훈 변호사는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를 동원하는 무력시위도 그때뿐이며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이 중단되지 않는 한 어떤 제재에도 김정은 정권은 꼼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남한사회가 할 수 있는 대북 압박 수단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뿐 아니라 북한인권법 제정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음.
- 또한 김 변호사는 "야당이 북한을 자극할까 우려스럽다며 지난 11년간 북한인권법 제정을 미뤘지만 돌아온 건 4차 핵실험이었다"면서 "더 이상 임시국회가 북한인권법 제정 없이 종료되는 걸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음.

■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18~22일 일본 방문(1/13, 연합뉴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북한의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전반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함.
- 지난 2010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처음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다루스만은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며 이번 일본 방문이 그의 마지막 공식 방문 일정이 된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가 1월 13일 밝혔음.
-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북한 인권 침해자들의 처벌을 위한 방법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음.
-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번 일본 방문 기간에 일본 정부 관계자와 납치 희생자 가족, 시민단체 등을 만날 예정이며 1월 22일 오후 도쿄에서 기자회견도 가짐.
- 다루스만 보고관은 한국과 일본 등을 방문해 얻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상황을 정식 보고하게 됨.

■ "미국 정부, 북한 김정은에 인권 침해 책임 직접 물어야"(1/15, 미국의소리)

- 미국 정부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밝혔음.
- 워싱턴의 민간단체인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과 올리비아 에노스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북한인권을 위한 다음 조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처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음.
- 보고서는 특히 미국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다른 고위 당국자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연루된 김 제1위원장과 당국자들을 규탄하고, 중대한 결과가 수반되는 제재 대상으로 지목해야 한다는 것임.
- 이와 관련해 보고서 공동저자인 클링너 연구원은 1월 13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제재가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음.
- 미국 정부가 인권침해와 관련해 미얀마와 브룬디, 콩고, 이란 등의 당국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특히 짐바브웨와 벨라루스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직접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것임.
-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음.
-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 붕괴 시 발생할 대량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함께 효율적인 난민 동화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만약 북한이 붕괴할 경우 최대 365만 명의 난민이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며, 사전에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동화계획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임.
-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 정부와 함께 장기적인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아울러 탈북자들 대부분이 탈북을 결심한 계기로 외부세계의 정보에 접촉한 것을 꼽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음.
- 또 미국 정부가 탈북자의 강제송환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중국과 라오스 등을 압박해 이들에 의한 탈북자 강제송환을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음.

■ "北 교화소 내 인권유린 지속…전염병에 하루 50명 사망도"(1/15, 연합뉴스)

- 북한의 공식 구금시설인 '교화소'에서 인권침해가 그치지 않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 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과 도경옥·이우태·임예준 센터 부연구위원은 북한이탈 주민들을 심층면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해 1월 15일 공개한 '북한 교화소' 보고서에서 "북한 전거리교화소와 개천교화소의 비인도적이고 열악한 구금 환경은 인간 존엄성을 위한 최소한의 처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 전거리 및 개천 교화소는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주로 수감되는 곳이며,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상대적으로 풍부해 두 교화소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음.
- 보고서에 따르면 두 교화소 수형자들은 대부분 허약으로 표현되는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대로 된 보급품 및 생활필수품이 결여된 상태이며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받기보다는 오히려 갖은 구타, 가혹행위, 고문에 시달리고 있음.
- 보고서는 "형벌의 부과로 수반되는 노동 자체를 국제규약에서 금지하는 '강제노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교화소의 비인도적 노동환경과 과도한 노동 부과는 교정시설이 지향하는 교화의 목적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음.
- 특히 "전거리교화소의 경우 증언에 따르면 보통 하루에 1~2명이 영양실조, 가혹행위, 질병으로 사망하고, 특히 결핵이나 열병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하루 30~50명 이상이 사망하기도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음.
- 북한의 교화소는 '형법'에 따른 공식적 구금시설로 인민보안부 교화국에서 관할함.
- 재판에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자를 수감하는 시설로, 정치범을 수용하면서 북한이 그 존재를 부인하는 '관리소'와는 성격이 다름.
- 전거리 교화소는 함경북도 회령시 무산리에 있으며 전체 수감인원은 3천~4천명 수준이며 개천 교화소는 평안남도 개천시 약수동에 있으며 정확한 수감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음.

3. 탈북자

■ 특이동향 없음.

4. 이산가족

■ 특이동향 없음.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탈북 국군포로 지원금 늘린다(1/12, 헤럴드경제)

- 귀환한 국군포로를 지원하기 위한 위로지원금의 지급기준이 중위소득으로 변경돼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됨.
- 12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월지급금 지원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의 43%로 하는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최저생계비를 중위소득 개념으로 변경하는 시행령을 의결했음.
- 이에 따라 귀환한 국군포로는 기준금액(중위소득의 43%)에서 1~3등급별로 각각 6배~10배씩 곱한 금액을 매달 받게 됨.
- 2등급 국군포로의 월지원금은 종전 430만원 가량에서 455만원 수준으로 높아지며 1등급은 650만원, 3등급은 389만원 가량을 매달 받게 됨.
- 위로지원금 중 한꺼번에 받는 일시지원금은 각 등급별 새롭게 정해진 월지원금의 40배를 받게 됨.
- 국군포로의 등급은 국내에 귀환해 등록할 때 정해지는데, 1등급은 억류 기간 중 동조를 거부한 사람이고 2등급은 억류 기간 중 생존을 위해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등 협조를 했지만 한국에 적대행위를 하진 않은 사람임.
- 억류기간 중 공공조직에 가입해 협조하는 등 한국에 간접적으로 적대행위를 한 사람은 3등급으로 분류됨.

7. 대북지원

■ 美 전문가 "中, 근본적 대북지원 건드리지 않을 것"(1/11, 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반발해 대북제재에 동참하더라도 근본적인 대북지원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음.
-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은 1월 11일 "(중국은) 북한의 존재가 중국에 전략적 완충제 역할을 하고 전략적 영향력 또한 제공한다고 믿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음.
- 북한이 핵실험 도발을 강행한 지난 6일 베이징(北京)에 머물며 정부 및 민간 관계자들을 만났다는 그는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중국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음.
- 그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경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식의 영향력 행사는 북한을 구석으로 몰아 역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중국은 주장 한다"면서 "중국이라도 북한과 소통 채널이 되는 게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논리 또한 펴고 있다"고 설명했음.
- 북중 관계의 현주소에 대해 그는 "2013년 이래 북중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음.
- 그는 "양국관계는 지난 10월 중국 류윈산(劉雲山) 상무위원의 방북으로 잠시 개선 조짐을 보이기도 했지만 북한 모란봉악단의 중국 공연 취소와 이번 핵실험 이후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다"면서도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서로 적대적으로 돌아설 가능성 또한 없다"고 말했음.

■ 캐나다 NGO, 매일 두유 10만 컵 대북지원(1/13, 자유아시아방송)

- 캐나다의 서부 밴쿠버에 자리 잡은 퍼스트스텝스는 이번 주 후원자들에게 보낸 전자우편 소식지를 통해 지난해 200톤의 콩과 미량영양소 480만포를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에 지원했다고 밝혔음.
- 200톤의 메주콩은 남포시와 형제산 구역, 강원도 내 23개 공장에서 생산되는 콩우유의 재료로 사용됐으며 강원도 등에 있는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200여 곳의 어린이 10만여 명에게 매일 제공됐음.
- 퍼스트스텝스는 매년 400에서 500만 포씩 보내는 미량영양소가 임산부와 유아의 건강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음.

- 미량영양소 '스프링클스'가 임산부 빈혈과 유아의 영양실조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 어린이영양연구소와 지역 진료소들의 관계자들도 스프링클스 효능에 매우 만족해했다고 설명했음.
- 소식지는 지난해 두유 제조기인 바이타고우트 두 대와 수퍼카우 한 대를 북한에 보냈다고 소개했음.
- 전기 없이 콩우유를 만들 수 있는 바이타고우트 한 대 당 하루에 1천 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단백질이 풍부한 콩우유를 제공할 수 있음.
- 퍼스트스텝스는 지난 13년간 북한에100대 이상의 콩우유 기계를 지원했음.
- 퍼스트스텝스는 올해 상반기에 콩우유 재료인 메주콩과 스프링클스를 추가로 보낼 예정이라면서 전력이 부족한 북한 현지 상황을 감안해 전력 없이 콩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두유제조기도 추가로 확보해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음.

8. 북한동향

■ 일본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2016~2017년) 개시 및 '北 인권 쟁점화' 등 역할 강조(유엔 주재 日 대사)에 대해 '미국의 反北 정책에 추종하여 손과 발을 맞추는 거수기, 침략세력의 우리(北)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조소 및 '과거청산' 촉구(1.10, 중앙통신·노동신문/주제넘게 놀아대는 정치난쟁이)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